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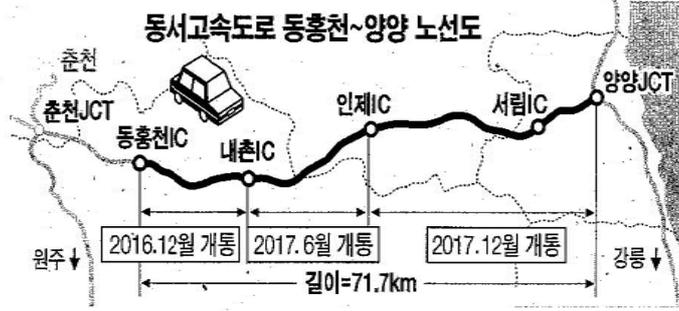
# 동서고속도로 '동홍천~내촌' 내년 우선 개통

국토부 황영철 의원에 입장 전달  
도 요구 전 구간 조기 개통 '난색'  
수도권 관광 수요 증가 등 기대

동서고속도로 동홍천~홍천 내촌 구  
간(16.7km)이 내년 연말께 우선 개통될  
전망이다. 동홍천~양양 구간 완전 개통  
시기는 2017년 12월 말이다.

30일 새누리당 황영철(홍천·횡성) 국  
회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식문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  
했다.

국토부는 또 내촌~인제 구간(20.6km)  
의 경우 토질 불량으로 인해 황치터널  
(9공구) 급착에 공사기한이 필요한 것



을 고려해 2017년 6월 개통을 추진하겠  
다고 밝혔다.

·도와 도 정치권이 요구해 온 전 구간  
2016년 조기 개통 요구에 대해서는 “예  
산, 공사 진척도 등을 고려하면 (조기  
개통은) 어렵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당초 국토부는 2008년 말 공사가 시

작된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71.7  
km)의 개통 시기를 올해로 계획했지만  
사업 예산과 절대 공기 부족 등의 이유  
로 2차례에 걸친 조정 끝에 2017년 12  
월 중으로 연기했다.

내년도 예산 증액 요구도 전 구간 일  
괄 개통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동서고속도로 서울~춘천~양양(150.2  
km) 사업은 1990년대부터 대통령과 국  
회의원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제  
시됐지만 10년 넘게 첫 삽조차 뜨지 못  
했다. 도는 결국 서울~춘천 간 61.4km를  
2004년 민자사업으로 우선 추진했다.

이 민자구간과 연결되는 동홍천~양  
양 구간은 2008년 12월에야 착공했다.

황 의원은 “그나마 국토부가 동홍천~  
내촌 구간 조기 개통을 추진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이 고무적”이라  
며 “앞으로 부분 조기 개통이 되면 동  
해안으로 이어진 도로망의 교통량 분  
산효과를 비롯해 수도권 관광수요 증  
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홍현표기자 hphong@kwnews.co.kr

## 원주국토관리청 불공정 건설 하도급 엄벌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  
장:전만경)은 올해 ‘불공정 하도급 해  
소센터’를 운영해 불법 및 불공정 하도  
급으로 13건의 신고를 접수, 이를 모두  
처리했다.

원주청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 6건에  
대해 14억6,900만원의 대금을 지급 조  
치했고 불법 하도급 등에 대해서는 해  
당 면허청에 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다.

점검을 통해 원주청은 하도급 대금 및

장비·자재 대금 미지급 9건 44억2,100만  
원, 어음 지급 1건 4억1,600만원, 대금 지  
연 지급 5건 7억9,600만원, 건설기계 대  
여 대금 지급 보증서 미발급 4개 현장 37  
건을 적발해 모두 해소했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전만경 청장은 “건설현장과 관련된  
문제는 관리 감독 기관의 타율에 의한  
해결보다 원청 및 하도급 업체, 건설근  
로자 등이 능동적으로 풀어가야 할 사  
안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넓혀가  
고 있다”고 말했다. 원주=유학렬기자

# 올림픽 경기장 모두 착공

재설계 진통끝 가속도  
컬링센터 이달부터  
중봉 알파인 60% 공정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신·개축중인 경기장이 모두 착공됐다.

강원도는 사업비 확정기 늦어지면서 착공이 지연됐던 컬링센터 개축공사 가 지난 23일 시작되면서 올림픽개최를 위해 신·개축중인 경기장이 모두 착공됐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정선 알파인 경기장을 비롯해 △슬라이딩센터 △보광스노보드 경기장 △스피드

## ◇올림픽경기장 공사 일정

경기장	착공일	준공일	공정률(%)
정선알파인	2014.5	2017.4	60
슬라이딩센터	2013.12	2017.2	61.2
보광 스노	2015.7	2017.6	25.1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2015.5	2017.3	23.5
강릉 아이스아레나	2014.6	2016.11	52.3
강릉하키센터	2014.7	2016.11	53.5
관동하키센터	2014.6	2016.11	59.4
강릉 컬링센터	2015.12	2016.11	착공(12.23)

드스케이팅 경기장 △강릉아이스아레나 △강릉하키센터 △관동하키센터 △강릉컬링센터 등 8개 경기장을 신축 또는 기존 경기장을 개축키로 했다.

이 가운데 정선알파인, 슬라이딩센터,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쇼트트랙,

아이스하키경기장은 신축하고, 스노보드경기장과 컬링경기장은 기존 시설을 보완해 사용할 예정이다. 경기장 건설은 정부의 사업비 절감 방침에 따라 재설계 등의 진통을 겪은 끝에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피겨·쇼트트랙경기장인 강릉아이스아레나는 지난해 6월 착공했다. 현재 52.5%의 공정률로 2016년 11월 완공될 예정이다.

아이스하키경기장인 강릉·관동하키센터도 지난해 7월에 착공했다. 현재 53.5%(강릉)와 59.4%(관동)의 공정률로 2016

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슬라이딩 센터는 2016년 10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61.2%의 공정률로 신·개축중인 경기장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내년 2월 테스트이벤트가 열리는 중봉 알파인 경기장은 지난 2014년 5월 착공해 현재 60%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사후활용 등의 문제로 지난 5월에서야 착공한 스피드 스케이팅경기장은 현재 23.5%가 진행됐다.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스노보드경기장과 컬링경기장은 가장 최근에 착공됐다.

지난 7월 착공한 스노보드경기장은 현재 25.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6월 완공예정이다.

사업비 확정기 늦어지면서 유일하게 착공하지 못했던 강릉컬링센터도 지난 23일 공사를 시작했다. 도는 2016년 11월까지 리모델링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백오인 105in@kado.net

## 도 평화대륙철도 건설 추진

삼척~제진·철원~유곡 철도망계획 반영

강원도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평화대륙철도 건설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중의 하나인 남북간 신뢰 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 기반 구축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부터 남북을 철도로 연결하는 평화대륙철도 건설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1945년 남북 분단으로 단절된 강원선 철도 복원사업을 시작했다. 1단계로 강원선 백마고지역~월정리역 간 9.3km 구간을 단선 철도로 복원하며 비무장지대(DMZ)~북측구간 연

결을 위한 남북간 협의도 진행키로 했다. 강원선 복원구간은 2017년 개통될 예정이다.

도는 강원선 복원사업을 계기로 동해선 삼척~제진 구간과 금강산선 철원~유곡 구간 철도 개선을 내년 상반기에 확정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동해선 삼척~제진 구간은 167.4km로 5조 356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원에서 금강산을 연결하는 금강산선 철원~유곡 구간은 21.63km로 철도건설에 6922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도는 동해선 삼척~제진 구간 철도 구축에 맞춰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될 수 있도록 북한 철도 개량사업도 추진한다.

총 사업비 1조 7006억원을 투입해 남측의 철도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북측의 나진~감호 구간 792km 철도에 대해 대대적인 개량작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북측 철도 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와 협의를 벌여 나갈 방침이다.

백오인 105in@kado.net



동서산업·이레건설 성금 전달 동서산업·이레건설(대표 정대환·사진 가운데)은 30일 오전 횡성군청을 방문해 한규호 군수와 이석원 행복봉사공동체 위원장에게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ADO**

2018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 개최도시 강릉!

'나도 스포츠' 실현! 시민모임 모집

- http://www.2018smile.kr
- 강릉시 동계올림픽지원단
- ☎(033)640-5561, 5947/010-8992-2018

**ADO** 2018 스포츠 마케팅 범시민 실천협의회

강릉 올림픽 아트센터 공사 낙찰 예정자

# 태영건설 컨소시엄 선정

2017년 11월 완공계획  
지상 3층 1000석 내외

2018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핵심 하드웨어인 '강릉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에 따른 우선시공분 및 실시설계 낙찰 예정자로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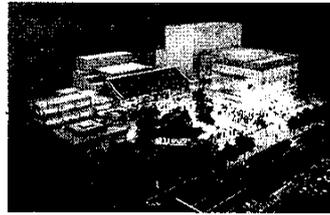
강릉시에 따르면 조달청 설계관리기획단은 지난 29일 오후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에 따른 최종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에 대한 설계 평가회를 열어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기본설계와 우선시공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최종 선정했다.

컨소시엄에는 태영건설을 비롯해 코오롱건설, 신화건설, 토진건설, 대건이 참여하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내년 3월까지 건축허가 및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5월까지 실시설계를 모두 마친 뒤 공사에 들어가 2017년 11월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총 사업비 509억원이 투입되는



올림픽 아트센터 조감도

올림픽 아트센터는 촉박한 공기 등으로 인해 설계와 시공을 함께 진행하는 '턴-키 방식'이 도입됐으며, 교동 실내체육관을 철거하고 해당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1000석 내외로 건립될 예정이다.

한옥 양식의 현 문화예술관은 내부 리모델링 등을 거쳐 소공연장 등으로 활용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아트센터는

반드시 2017년 11월까지 건립돼야 이듬해 2월 열리는 동계올림픽 때 사용할 수 있다"며 "내년 1월 실내체육관 철거를 시작으로 우선시공분에 대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릉/구정민 koo@kado.net

경계 허물어라!... 건설수주 패러다임 대전환

# ‘공공·민자’ 융복합 바람 거세진다

환경 변화에 따라 건설시장도 전통적인 공공부문과 민간투자사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특히 공기업들이 '경영 정상화'의 일환으로 그동안 100% 재정으로 추진해온 공공 건설공사에 다양한 민간투자를 접목하고 있어 이 같은 추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30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설공사를 나랏돈으로 집행해온 공기업들이 공공과 민자를 섞은 다양한 입찰제도를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공기업들이 부채 감축을 위해 그동안 재정에 의존해온 것에서 벗어나 시장에 넘겨주는 유동성을 공공공사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이재영 사장 재직시절인 지난 2013년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공모를 집행

민자 결합 공공사업 일감 늘어 입찰방식도 다양한 형태 진화

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이어 한국도지주택공사(TH)는 이재영 사장이 취임하며 지난해부터 대항개발 사업을 비롯해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와 민간참여 공공 주택건설사업을 잇따라 선보이며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하남감일지구를 대상으로 지구조성사업과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묶은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공공 임대주택 건설공사에 기술공모형 입찰을

선보이며 그동안 최저가낙찰제 집행에 따른 품질 저하를 해소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도 최근 공기업 최초로 선보인 민간자본 활용 시설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입찰제도 융복합에 합류했다. 애초 낙찰자가 5년 동안 수백억원의 공사비를 선투자해 '의상공사'란 논란을 일으켰지만, 이를 시범 적용한 중부고속도로(호법~하남)와 영동고속도로(여주~강릉) 4개 공구 입찰에 무려 17~18개사가 참가해 흥행을 이뤘다.

도로공사는 이를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농어촌공사도 수변개발사업과 유희부지 개발을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며 민간자본 유치를 꾀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공사로 나올 일감이 민자

와 결합될 다양한 형태로 전환함에 따라 전통적인 공공과 민자 간 구분이 모호해져 건설업계의 공공부문 수주실적 집계에도 혼란이 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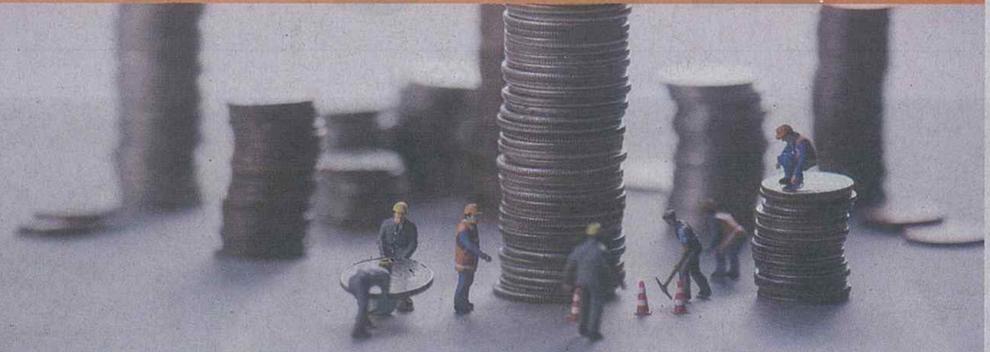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통적인 공공부문 입찰형태는 기술형입찰과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 수의계약인데 공기업들이 새로운 유형을 선보이고, 기업별로 실적을 잡는 기준도 달라 금액과 순위를 매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재정부족에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 실적 집계에도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입찰제도를 포함한 올해 공공부문 수주 실적에서는 대림산업이 1조3974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 관련기사 6면  
채희찬기자 chc@

## 건설공사비 현실화 속도

공사비 산출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항목의 개정 및 신설이 이어지면서 공사비 현실화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품셈 일부 개정안이 새해 1월부터 시행되는 데 이어 3월에는 표준시장단가 추가 공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 공사비 하락 원인 '실적공사비' 대안

# ‘표준시장단가’ 300개 항목 내년 3월 추가공고

먼저 국토부의 이번 표준품셈 일부 개정안은 공사비 현실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전체 2416개 항목 가운데 상반기 24개에 이어 하반기에는 269개 항목을 정비했는데, 실제 적용되지 않는 107개 항목을 삭제하고 147개 항목을 보완, 15개 항목을 신설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워낙 항목이 많고 재료비까지 반영하던 것을 노무비만 반영하는 등 방식이 바뀌어서 공사비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적용 실적이 없는 항목을 삭제하는 등 현실화한 것이 특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표준품셈 현실화에 이어 공사비 하락의

철근콘크리트 등 주요공종 공사비 상향 책정 효과 업계, 현장 여건 따른 보정기준 마련도 기대

원인으로 지적됐던 실적공사비의 대안으로 도입된 표준시장단가는 내년 3월에 추가 공고가 이뤄지면서 항목을 늘릴 예정이다.

내년 1월 중 시공단가 조사에 이어 2월 전문가협의회 회의와 심의를 거쳐 3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시공단가를 토대로 마련되는데 입찰과

계약단가는 이미 정해진 셈이어서 사실상 시공단가 조사가 변수다.

현재 표준시장단가는 1968개 항목 가운데 약 700개가 공고됐고 이어 3월에는 약 300개가 새로 공고될 예정이다. 겹치는 항목이 있지만, 전체 항목 가운데 최대 절반 가량이 표준시장단가로 새로 공고되는 셈이다.

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 확대가 공사비 현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 같은 건설공사의 주요 공종에서는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면서 공사비가 상향 책정된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또 표준시장단가 보정

에 대한 기준 마련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공사비는 항목별로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일례로 도심지에서 하는 공사가 새로 만드는 신도시 공사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신설 표준시장단가에는 아직 보정기준이 없어 공사가 어려운 곳이라고 해도 공사비 할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를 표준품셈 기준을 준용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보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방법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준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정성기자 jskim@

**국토부, 293개 항목 표준품셈도 개정**

**“시공현장 현실 적극 반영”... 내년 1월부터 적용**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이란 대표적이고 일반화된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공사에 소

요되는 재료비·인건비·기계 경비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에서 공사금액을 예측할 때 활용한다.

정부는 매년 8월과 12월 두 차례씩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를 열어 표준품셈을 개정한다. 올해는 전체 2416개(2015년 1월 기준) 품셈항목 중 293개 항목(상반기 24개, 하반기 269개)을 정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능이 향상되고 현대화되는 시공현장의 현실을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부문별로는 토목 174개, 건축 106개, 기계설비 13개 등의 표준품셈이 개정됐다. 토목분야에선 가설공사에서 동바리 설

치수량 및 품을 시설물의 구조에 적합하게 높이(2.5m, 3.5m, 4.2m)와 간격(0.6m, 0.8m)별로 세분화했다. 지금까지는 암거, 교량 등 구조물 유형별로만 동바리를 구분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가설 시설물에 대해 구조에 적합한 수량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대형사고가 빈번한 가설구조물 공사에 대한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축분야에선 지붕공사와 흙통공사에서 쓰지 않는 기와, 슬레이트, 합석을 삭제하는 대신 사용빈도가 늘고 있는 금속기와, 금속판을 신설했다. 또 현장제작 및

납땜, 용접과 같은 재래식 시공방법에서 성능이 개선된 기성품설치, 클립, 고리연결 등 현대식 시공방법으로 설치품을 바꿨다. 아울러 지붕공사에서 일반경사와 급경사를 구분하고 급경사 이상에서 작업효율이 낮은 것을 감안해 외벽 시공에 대한 합중 기준을 제시했다.

기계설비분야의 경우 공기조화 설비공사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의 규격을 1만 3000kcal, 1만 6000kcal, 2만kcal에 이어 2만 5000kcal과 3만kcal을 추가했다. 레인지 후드 역시 600~700mm에서 ‘700mm 이하’, ‘900mm 이하’를 규격에 추가했다.

내년에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김태형기자kth@

**오늘의 주요 일정**

- ▶통계청, 2015년 12월 및 연평균 소비자물가동향
- ▶공정위, 2015년 12월 중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변동현황 발표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올 건설수주 사상 최대치 경신... ‘130兆 고지’ 보인다**

지난달 말 기준 건설수주가 12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올해 마지막 달 신규수주는 물론 장기계속공사, 증액공사 등을 포함할 경우 140조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 말까지 건설수주(경상)는 119조4736억원으로 전년 동기(77조6244억원) 대비 53.9% 증가했다.

건설수주는 올 1월(7조2160억원) 전년 동월 대비로 30.5% 증가한 이후 2월(5조3673억원) 3.3%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3월(12조2375억원) 들어 무려 150.0% 급증하며 상승폭을 크게 확대했다.

이어 4월(9조476억원) 22.9%, 5월(12조5563억원) 83.7%, 6월(13조5594억원) 46.7%, 7월(8조6805억원) 24.6% 늘어나는 등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8월(8조4959억원) 들어서는 2.2% 감소로 추축했지만 9월(19조973억원) 128.0%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월의 부진을 만회했고 10월(10조1062억원)과 11월(13조1097억원)에도 각각 30.3%, 104.0% 늘

**11월까지 119조4736억원  
한달 남기고 2007년 추월**

**증액공사 등 포함하는  
건설협회 조사 기준으론  
년 140조원 돌파 가능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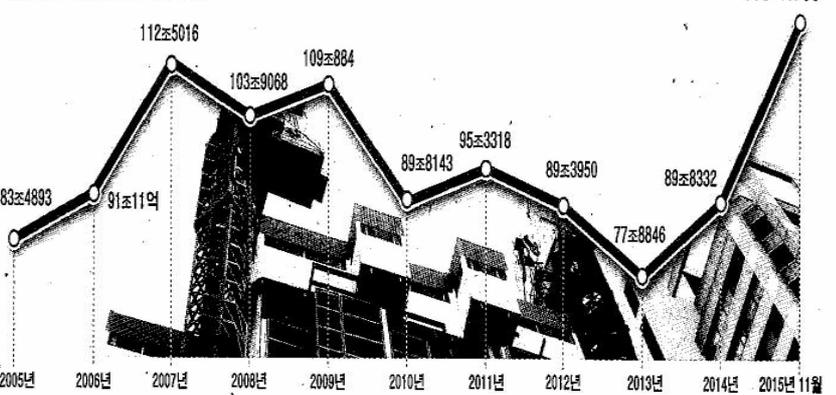
어려 올해를 한 달 남겨두고 기존 최대치(2007년 112조5016억원)를 훌쩍 뛰어넘었다.

올해 건설수주가 일찌감치 사상 최대치를 돌파한 가운데 연간 수주실적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일단 전전년 건설업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표도가 54%가 되도록 기성액 순위 상위 기업체를 선정, 조사하는 통계청 기준으로는 130조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들어 월 평균 수주 규모가 10조원을 웃돌고 있는 데다 12월 실적에 상대적으로

건설수주액(경상) 추이 (단위: 억원)



로 높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수주 패턴을 적용할 경우 130조원을 무난하게 뛰어넘을 전망이다.

실제 지난 2013년과 작년에도 1월부터 11월까지의 월간 수주액이 10조원을 밑돌다가 12월 들어 각각 12조6982억원, 12조2088억원으로 올라서며 연중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여기에 통계청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건설사의 신규수주와 증액공사 등을 포함하는 대한건설협회 조사 기준으로는 14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열려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달 주택, 사무실, 점포 등 건축과 도로·교량, 철도·케도 등 토목이 동반 증가하고 발주자별도로 공공과 민간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건설수주와 달리 건설기성의 사상 최대치 경신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올 들어 11월 말까지 건설기성(발본)은 80조8267억원으로 전년 동기(80조1328억원) 대비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건설기성은 올 1월 전년 동월 대비로 4.4% 줄어든 뒤 2월 0.2% 증가로 전환했지만 3월 -1.8%, 4월 -8.4%, 5월 -4.7%로 3개월 연속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6월 0.8% 증가한 이후 7월 0.4%, 8월 3.5%, 9월 13.7%, 10월 4.3%, 11월 5.7%로 6개월 연속 높아졌으나 증가폭이 작아 기존 최대치(2007년 101조8897억원)를 초과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민기자knp@

아하! 그렇구나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이행지체 책임

**Q**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가 약정한 공사를 준공 기한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 이연대하여 책임을 지는가, 아니면 지체에 책임이 있는 특정 구성원만이 책임을 지는가?

**A** 분담이행 방식 공동수급체와는 달리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는 도급인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분담이행 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지만, 공동이행 방식은 도급인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공사의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가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도급인에 대한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도 구성원 모두가 져야 한다. 지체상금 부과 기준 금액도 직접 지체 책임이 있는 구성원의 도급금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도급금액까지 합친 전체 공동도급금액이 된다.

“甲과 乙이 함께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국가로부터 도급받아 甲은

포장을 제외한 전체 공사를, 乙은 포장공사를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공사 중 甲 및 乙이 각각 책임지기로 한 부분이 특정되어 있기는 하나, 공사이행에 관하여 상호연대보증을 하였으며 도급인의 입장에서 보면 甲 및 乙이 맡은 각 공사는 전체로서 지하차도 확장공사라는 하나의 시설공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또한 위 공사의 성질상 乙이 맡은 포장공사는 甲이 맡은 나머지 공사를 완공한 후에 할 수 있는 공사이어서, 甲이 자신이 맡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乙도 그가 맡은 포장공사를 준공 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것이며,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 기한도 甲이 맡은 공사만의 준공 기한이 아니라 乙이 맡기로 한 포장공사까지 포함한 공사 전체의 준공 기한이므로, 甲이 자신이 맡은 공사를 위 준공 기한 내에 하지 못함으로써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甲이 맡은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공사의 전체 공사대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887 판결).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건설산업연구원, 선출직 이사 9인 선임

최삼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사장은 최근 건산연 선출직 이사 9인을 선임했다. 새로 활동하는 이사 9인은 △정현태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장(주정명건설) △이덕인 " 인천광역시회장(정일종합건설(주)) △정성욱 " 대전광역시회장(주금성백조주택) △조종수 "

대구광역시회장(주서한) △오인철 " 강원도회장(주태성종합건설) △이권수 " 광주광역시회장(고운건설(주)) △김영구 " 전라남도회장(주세진종합건설) △윤현우 " 충청북도회장(주삼양건설) △소재철(주장한종합건설 대표다. 임기는 3년이다.